

미국, 8일째 흑인 사망 항의집회...“폭력 줄고 시위 늘어”

주지사 4명 '방위군 차출' 거부...플로이드 부인 눈물의 회견
오늘부터 추모행사 잇따라 열려...확산이나 진정이나 고비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에 따른 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미국 전역의 시위가 8일째 접어들었다.

로이터통신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항의 시위는 2일(현지시간) 오후 수도 워싱턴DC를 비롯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재개됐다.

워싱턴DC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국회의사당 외곽 잔디밭과 링컨 기념관 앞에 모여 “침묵은 폭력”이라거나 “정의도 평화도 없다”는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는 한쪽 무릎을 꿇은 채 백인 경찰의 ‘목 누르기’에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했고, 철제 울타리 뒤편의 경찰을 향해 “무릎을 꿇어라”, “경찰은 누구를 보호하는가”라고 소리쳤다.

뉴욕에서도 수천 명이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며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했다. 플로이드의 고향인 텍사스주 휴스턴과 LA에서도 시위대가 거리를 가득 메웠다. 콜로라도주에서는 폴 페이즌 덴버 경찰서장이 평화 시위를 당부하면서 시위대와 함께 팔짱을 끼고 행진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플로이드의 부인 루시 워싱턴은 이날 6살 딸 지아나와 함께 남편이 숨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워싱턴은 “플로이드는 좋은 남자였다. 경찰이 나에게서 그를 앗아갔다”며 “지아나는 이제 아빠가 없다. 플로이드는 지아나가 어른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됐다”고 흐느꼈다.

밤이 되면 폭력 시위로 돌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강력한 야간 통행금지령도 이어졌다. 뉴욕시는 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적용되는 통금령을 이틀째 실시했으며, LA카운티는 전날부터 12시간의 통금 조치에 들어갔다. 주 방위군은 이날 현재까지 29개 주(시)에 1만8000명이 배치됐다.

CNN방송은 이런 병력 규모는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병력과 맞먹는 규모라고 전했다.

주 방위군 사령관인 조지프 켈은 기자 회견에서 “전국에 걸쳐 지난밤 폭력 행위는 줄었지만, 시위 자체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 정부들에 시위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지만,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반기를 드는 상황도 빚어졌다. 국방부는 워싱턴DC의 시위대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주 방위군을 수도에 보내 달라고 인근 주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뉴욕,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주는 이 요청을 거절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 주 방위군을 주 바깥으로 보내라는 어떤 요구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시위대가 성조기를 거꾸로 들어 보이며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시위대가 성조기를 거꾸로 들어 보이며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흑인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가 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지는 동안 시위대와 주방위군이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뜻에서 함께 '무릎 꿇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치안공백’ 필라델피아 한인 속수무책...“트럭으로 박스째 약탈”

한인 점포 50여곳 피해
“그냥 앉아서 당하는 실정”

미국 내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필라델피아 한인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지 치안력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한인 상점들의 약탈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대형 한인타운인 형성된 로스앤젤레스(LA)나 뉴욕만큼은 아니지만, 필라델피아에도 약 7만명의 교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교민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50개 안팎의 한인 점포가 항의 시위대의 약탈 공격을 받았다. 대략 30곳의 뷰티 서플라이(미용용품) 상점을 비롯해 휴대전화 점포, 약국 등이다. 나상규 펜실베이니아 뷰티 서플라이 협회장은 “한인 뷰티 서플라이 점포가 100개 정도이니 30%가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흑인 상대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상권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필라델피아의 흑인 커뮤니티는 지금도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현지 경찰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인 소유의 한 대형 상가는 4~5시간 동안 모두 털렸지만, 경찰은 수차례 신고에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 300만~400만 달러 상당의 물건들로, 약탈범들은 길가에 트럭을 세워두고 박스째 물건을 실어갔다. /연합뉴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는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면서도 백인-히스패닉 인종을 가릴 것 없이 폭력적인 약탈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말 시위가 격화했다가, 펜실베이니아주 방위군이 배치되면서 폭력 수위는 다소 진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운타운에 집중 배치되다보니, 도심권에서 떨어진 한인상권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른 황 필라델피아 한인회장은 통화에서 “다운타운은 펜실베이니아주 병력이 나서면서 약간은 자제가 된 것 같은데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도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현지 경찰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인 소유의 한 대형 상가는 4~5시간 동안 모두 털렸지만, 경찰은 수차례 신고에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 300만~400만 달러 상당의 물건들로, 약탈범들은 길가에 트럭을 세워두고 박스째 물건을 실어갔다. /연합뉴스

美 'G7 확대 구상'에 “일본 정부 곤혹...존재감 하락할 수 있다”

“단순 초대인지 확대 개편인지
트럼프 진의 파악 못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참가국 확대 의향을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일본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해 4~5개국을 정식으로 가입시켜 G11 또는 G12로 재편하는 경우 일본의 발언권 약화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G7 재편을 계기로 미중 갈등이 격해질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마이니치(毎日)신문은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G7를 자체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의문을 제기한 것도 일본 정부 내에 파문을 일으켰다”고 3일 보도했다. 4개국을 추가해 G11로 재편한다는 것인지, 의장국 권한으로 이번 회의에만 초대하겠다는 것인지 미국의 진의가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마이니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G7 개최를 연기한다는 연락은 받았지만, 참가국 확대에 관해서 보충 설명은 없었다고 밝혔다. 만약 G7을 G11로 재편하는 경우 아시아 참가국이 한국, 일본, 인도 3개국으로 단번에 늘어 일본의 존재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마이니치는 “미국이 러시아나 인도 등 4개국을 가입시켜 ‘중국 포위망’ 구축을 노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은 미중 대립이 더 격해질 것을 우려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확대를 제안한 것에 일본 정부 내에서 곤혹이 확산하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 정부의 향후 움직임을 면밀하게 살펴볼 테세”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당혹감을 느끼는 것은 미국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외교 경로로 전했고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복수의 일본 외무성 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의 확대 의향을 표명한 후 외교 당국 간 대화에서 미국 정부 고위 관료가 조기에 틀을 확대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고 설명했다.

미국 고위 관료는 “정식으로 신규 멤버를 가입시키는 것과 초대국으로 부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며 “정식 가입이라면 G7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2억달러 이상 지급
6월 중순까지 일터복귀 기대
방위비 조속 합의 또 압박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이 연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2020년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지난 방위비분담금 협정(SMA)의 유효기간 만료로 4000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주한미군은 늦어도 6월 중순까지 모든 한국인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연말까지 한국 부담 수용”

비 분담이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우리 동맹국(한국)이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한 합의에 이를 것을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고 한국도 똑같이 해주길 요청한다”면서 “합의가 없으면 대단히 중요한 국방 인프라 프로젝트가 계속 보류될 것이고 모든 주한미군 군수지원계약에 미국이 완전히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방위비 분담이 계속 불균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중장기 준비태세가 계속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여전히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13% 인상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50% 인상규모인 13억 달러를 요구한 상태로 이달 중 열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재차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오늘의 결정으로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노동력에 대한 한국의 자금지원에 연말까지 2억 달러(한화 2430억원) 이상이 제공될 것”이라며 “게다가 이는 준비태세 및 한국인 근로자,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이 2019년 12월 31일 종료된 후 미국은 일반적으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모든 비용의 부담을 짴어왔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와 군수지원 계약, 건설 프로젝트 설계 및 감독 비용 등을 거론했다. 미 국방부는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한 SMA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미국이 상당한 유연성을 보이고 만큼 한국도 그렇게 해달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미 국방부는 “한미 정부 간 공정한 방위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 도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